

OPINION

2025년 8월 4일 월요일

데스크칼럼

장승기

정치부 부국장



민주당 일색인 광주시의회의 자중지란이 점입가경이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개원 34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무소속 위원장과 국민의힘 부위원장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재적 의원 23명 중 2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당 의원들 간의 '감투 싸움'으로 이같은 결과를 자초하면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해당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10명의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한 상태다.

일단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9명 전원이 사퇴를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되는 듯 하지만, 그동안 제9대 후반기 광주시의회가 보여온 끊임없는 밥그릇 싸움과 자중지란에 대한 비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다.

광주시의회 의원들 간의 자리 다툼은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원 구성 때부터 격화됐다. 의장단 투표 등 의원 구성 과정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면서 후반기 의원 구성이 개원 49일 만에 일단락되는 촌극이 빚어졌다.

특히 의장 선거 과정에서는 일부 후보 간의 연합설이 불거졌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원 구성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단독 입후보한 위원장을 낙마시키고 재투표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초래했다. 또 교육문화위원을 '제비뽑기'라는 초유의 방식으로 상임위원을 결정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때문에 민주당 일색인 광주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의정

민주당 일당 독점에 광주시의회 '자중지란'

활동보다는 밥그릇 싸움으로 후반기 의회를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7월 19일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원 구성을 마쳤지만, 예결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 3명이 내부적으로 후반기 예결위원장 후보로 나섰지만 이들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이때부터 시의회 예결위원장 선임 문제는 불거졌다. 더욱이 민주당 시의원들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예결위원 명단을 의원총회를 통해 독단적으로 바꾸는 '꼼수'를 부리면서 일당 독점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다.

이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감투 싸움'으로 파행 속에 시작된 제9대 광주시의회의는 후반기 원 구성을 한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위원회 일부 의원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조례에도 없는 '상임위원장 사퇴를 위한 조례'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민주당 의원들 간의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드러났던 갈등은 더욱 커져만 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원들 간 갈등 중재에 나서야 할 시의회 의장은 뒷짐만 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지난 4월에는 민주당 의원 간 내부 갈등 끝에 최초로 집단 사보임 사태가 벌어졌다.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의원 3명을 운영위원으로 보임했다. 기존에는 지역구 현안 해결 등을 위해 특정 의원 간 1대 1 사보임을 한 사례는 있지만 내부 갈등으로 집단적 사보임을 단행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광주시의회는 지난 6월,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행태를 보였다. 12·3 내란을 옹호하는

등 대표적 관변단체로 꼽히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결국 폐기하기로 한 것이다. 조례안 심의를 통과시킨 행자위 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시민사회는 '내란 옹호 단체에 세금을 지원하겠다는 광주시의회의는 제정신이나'며 시의회 해산을 촉구했다.

그러다 지난 7월 중순 광주지역에 기상 관측 이래 최대 물난리로 극심한 피해가 속출했지만, 광주시의회는 예결특위 구성을 놓고 '밥그릇 싸움'에만 치중했다. 특히 예결위원들은 차후 민주당 광주시당의 진상 조사에서 무소속 위원장 선출이 '합의 추대'가 아닌 '쪽지 투표'로 민주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 의원이 선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과 불법수의계약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의원들을 윤리특위 위원으로 선임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위원회 해산 요구까지 받고 있다.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부르기도 마땅한 제9대 광주시의회가 도덕적 해이를 넘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정가에서는 현재의 광주시의회를 한마디로 "다들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한다. 이러한 광주시의회의 자중지란과 막장 행태가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의 일당 독점 구조' 때문이다.

민주당은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징계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제9대 후반기 광주시의회의 한 편의 '막장 드라마'처럼 볼 것을 다 보여줬다. 시민들은 이러한 민주당 일색인 광주시의원들의 자중지란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과 시의원들이 시민을 외면한다면, 결국 선거를 통해 냉정하게 평가받을 것이다.

특별기고

임택

광주 동구청장



안대로 눈을 가리고 옷이 지팡이에만 의지해서 걷기, 두 발로 푸른길 공원을 산책하는 대신 전동 휠체어에 탑승하니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편하지 않아 10여분도 채 되지 않아 식은땀이 연신 흘렸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두려움에 막막했고, 작동이 서툰 휠체어는 경사에도 혼자서 이동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필자가 지난해와 올해, 장애인의 날을 맞아 마련한 체험에 참여하면서 평소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행동과 지나쳐 왔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버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턱을 낮추고, 길을 이어 나가면서 보여주는 식 정비나 아닌, 차별 없는 시선과 도시가 함께 도와주고 밀어주는 것이 급선무였다.

동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은 5400명(5.2%)으로 인구 대비(10만5000여명) 광주 5개 자치구 중 높은 수치다.

올해는 남구가 더 높지만, 동구 역시 2순위로 상위권이 다. 이미 동구는 지난해 4월 '다름이 아닌 공간으로 함께 하는 장애인 친화도시'로서 비전을 선포했다. 어쩌면 신체·정신적으로 비장애인과 비교된다고 해서 밀고 행동으로 불편함을 주는 건 없을 것 같은 편견이다.

특정 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닌, 장애인들의 삶이 비장애인과 비교되지 않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도움이 될

사람 중심에 둔 '장애인 친화도시' 향한 실천

요하다면 개선하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 구조를 만들어야 했다.

말만 앞서서 탁상행정에서 탈피, 사소하고 미미한 것들이라도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기반형 행정'을 위해 최근 선진지 견학차 서울로7017, 인사동 문화의 거리, 우면산 무장애 숲길 등을 둘러봤다. 인도와 차도에 턱이 없는 보행자 전용 도로와 녹지가 결합된 '무장애 거리' 도시 곳곳을 살피고, 서울 동작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피움살'을 방문했다.

구술이 서 말이라도 껴야 보배이듯이, 올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소득 보장 제도 강화·자립생활 지원, 맞춤형 교육·여가생활 지원, 사회참여·권리보장 등 4대 전략 16개 추진 과제·58개 사업을 수립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광주지역 최초로 시행에 나선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 휠체어·스쿠터) 배상책임보험'은 대표적인 생활 기반형 정책 중 하나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운행 중에 대인·대물 피해를 주는 사고를 당했을 때 건당 최대 200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까지 보장을 주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를 위한 상점 진입로와 화장실을 갖추고, 점주와 직원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이 운영하는 장애인화장게인 '열린 가게' 9곳을 지정했다. 앞으로도 계속 열린 가게는 확대되고, 자연스럽게 골목상권도 '선언 없는' 점주와 직원들은 늘어날 것이다.

이뿐 아니라 공공 행사장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들이 찾을 때 내·외부 출입 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공감 매트'를 연중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220여명의 일자리를 통해 작은 일이라도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동구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한 '무장애 나들이 공감여행' 등 단순히 시설 개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가족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점차 만들어 나가고 있다.

'차별 없는 주민참여단' 운영 역시 행정이 계획하고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과 현장 활동가들의 불편함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 동구는 특별한 것이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챙기고, 그 부분이 도시 전체의 품격으로 이어지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어쩌면 장애인을 위해 '따로 무엇을 더 해줘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따뜻한 배려, 경사로, 버튼 위치, 문턱의 높이까지 그들에게는 지역사회와 단절되느냐, 연결되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어서다.

아무리 좋은 복지, 문화, 교육이 있어도 누릴 수 없다면 비장애인과는 다른 특권일 것이다. 그러니 사람의 삶을 중심에 두는 행정, 인문도시 동구답게 장애인들까지 모두 아우르는 '장애인 친화도시'를 향한 실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취재수첩

의료 정상화 이뤄지길

이산하

지역사회부 차장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점차 봉합되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의대생들이 이일부터 교육현장으로 복귀를 한다. 본과 3·4학년 학생의 실습을 시작으로 본과 1·2학

년의 수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2024학번과 2025학번 학생들도 9월 개강해 1학기에 들지 못한 과목은 2학기 와 올해 겨울방학, 내년 여름방학을 통해 부족했던 강의를 채워나가기로 했다.

또 본과 3·4학년에 한해 국가시험을 추가시험 추가 시행하기로 했으며, 정부와 의료계는 2027년 적정 의사 수를 합의하는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출범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공의 단계도 환자단체를 만나 장기간 이어진 의료 공백을 사과했다. 특히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드는

'미래 의료 재건'으로 의료 갈등 사태가 장기화한 데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의료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점이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의정갈등이 봉합된 후가 더 문제라 하소연한다. 전공의들이 들어오더라도, 이들을 가르칠 후배 전문의들이 없다는 게 이유다.

실제 의정 갈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사직했고, 이에 따른 업무 과중 등으로 한계에 부딪힌 전문의들이 이직·개업으로 수련병원을 떠났다.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전공의를 상시 채용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어 애로를 겪고 있다.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해 나가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다.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에 대비해 하루 빨리 의료 정상화를 이루길 기대한다.

사설

전남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 성공하길

전남이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핵심기지가 된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차세대 전력망 구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 사업의 첫 실증지역으로 재생에너지 보급률 전국 1위인 전남을 선정할 것이다.

차세대 전력망은 전력을 소비하는 배전망 단위에서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말한다. 다시 말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계해 지역 단위에 서 안정적으로 전기 생산과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전력망은 송전망에 연결된 대형 발전기의 전력이 전국의 수요처로 전달되는 '단방향' 방식인데 반해 이 전력망은 배전망에 주로 직접 연결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배전망을 타고 가까운 수요처로 보내지고, 남은 전기가 송전망으로 다시 전송되는 '양방향' 계통이다.

전남이 첫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재생 에너지 실증지역으로 전국에서 이만한 데가 없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국 태양광 발전량의 약 20%, 풍력의 약 40%를 책임지고 있는 데다 현재 신안 해역에는 세계 최대 규모(8.2GW)의 해상풍력 단지까지 조성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에너지공단,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등 에너지 특화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어 실증연구, 기술 창업, 인력 양성까지 가능한 최적의 조건까지 갖춘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남 지역을 광역단위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전력시장과 관련한 규제 특례를 과감하게 적용하고, 대규모로 ESS 설비를 구축해 전력망 유연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 대학 캠퍼스, 공항, 군부대 등에도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해 다양한 기술의 실증에 나선 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전남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단지와 장주기 ESS, 그린수소 설비가 결합된 탈탄소 산업전환의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예정이다.

전남에서 출발하는 차세대 전력망 실증은 단순한 지역 실험을 넘어, 대한민국 전력 시스템 전환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광주시내버스 노선 개편 수요 반영돼야

광주시가 내년 10월 시내버스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한다. 이는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앞두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선제적 조치다.

지난 2017년 이후 9년 만에 시행되는 대규모 조정이기도 하다. 이번 노선 개편의 핵심 포인트는 시내버스 서비스 질 향상과 운영 안정성 강화라고 한다.

이를 위해 간선 노선의 연결성과 신속성 강화, 지선 노선의 생활권 접근성 향상, 다양한 교통 수요와 이동패턴 변화에 대응한 서비스체계 도입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광주 광천권역에 조성 중인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와 주상복합단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급행 간선버스 4개 노선을 신설한다.

또 광산구 교통소외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DRT·Demand-responsive transport) 도입이 추진된다.

이는 차량이 고정 경로나 시간표에 따른 운행보다는 특정 수요에 따라 운행 경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휴대용 앱·전화 등을 통해 서비스를 호출할 경우 승객이 원하는 위치에서 태우고 내려준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기도 부천 소사구와 오정구를 지난해부터 오가는 '뚝버스'와 충남 당진시 서천군 흥성군에서 운영 중인 충남 수요응답형 교통 등이 있다고 한다.

또 광주와 나주, 담양, 화순 등 인접 시·군을 운행하는 13개 노선에 대해서도 중부구간 정비와 효율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버스 노선 설계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역 교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중교통 혁신회의와 버스조합 및 운수사 간담회 등을 추진해 현장·경영 측면의 실질적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후 공청회와 시물레이션 검증 등을 통해 2026년 10월 노선 개편 시행 전까지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지역에 최적화된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10 경제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집부 370-7082 사전부 370-7050	논설실 370-7060 미디어본부 370-7222 임원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사업국 370-7090 광고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